

# 트럼프 사법방해 혐의... 힘입는 탄핵론



## 러시아에 IS 기밀 유출

### FBI 수사 압력 의혹 증폭

### 민주당 “탄핵 요건 충분”

이따른 스캔들에 휩싸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이 수면 위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연방수사국(FBI) 국장 해임부터 러시아로의 기밀유출 의혹, 여기에 러시아 관련 수사중단 요구 의혹까지 불거지며 탄핵론이 힘을 받는 분위기다.

민주당 앨 그린 하원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남용으로 비칠 수 있는 이 사안에 대한 의회의 반발은 컸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탄핵론을 거론하는 이들은 민주당의 극소수 의원에 불과했다.

탄핵론의 확산을 불려온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동맹국이 제공한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15일 워싱턴포스트(WP) 보도였다. 미국의 국가 안보와 동맹국의 신뢰 유지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파장은 컸다.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민주당 의원은 10여 명으로 늘어났고, 공화당 의원들마저 비판에 가세했다.

그럼에도 기밀유출 보도를 한 WP 스스로 ‘트럼프 탄핵은 시기상조’라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낼 정도로 탄핵론에 대한 지지는 약했다. 기밀을 해제하는 것은 대통령의 절대적인 권한인 만큼, 탄핵을 끌어낼 수 있는 위법행위는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코미 전 국장을 만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중단하라는 압력을 넣었다는 16일 뉴욕타임스(NYT) 보도는 트럼프 탄핵론의 급격한 확산을 불려올 수 있는 핵폭탄급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바로 코미 전 국장에 대한 수사중단 요구가 사법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검사나 경찰에게 허위로 진술하거나 증거를 숨길 경우, 증인이나 배심원을 협박할 경우, 재판부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을 사법방해죄로 규정해 처벌한다. 이는 장기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에게 수사중단을 요구했다는 NYT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충분히 사법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다. 나아가 미 헌법이 규정한 탄핵 요건에 해당한다.

미 헌법은 대통령이 반역, 뇌물, 기타 중대 범죄 및 비행으로 기소되면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사법방해죄가 적용된다면, 이는 탄핵 요건으로 규정된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법리상의 탄핵 요건은 중요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탄핵의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미 의회 내 의석수 그리고 국민의 탄핵지지 여부이기 때문이다.

미 의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하원에서 과반수, 상원에서 3분의 2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미 역사상 탄핵이 현실화했던 2명의 대통령이

탄핵을 가까스로 모면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엄격한 요건 때문이다.

미국의 앤드루 존슨 전 대통령은 남북전쟁 후 남북화해 정책을 거부한 국방부 장관을 해임한 것으로 1868년 의회의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하지만 하원을 통과한 탄핵안은 상원에서 정족수에서 단 한 표가 모자라 폐기됐다.

현재 미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견해가 아직은 지배적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안심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그의 인기가 너무 낮아 공화당 의원들이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15일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38%로 역대 대통령의 취임 초기 지지율보다 20%포인트나 낮은 역대 최저치다. 대통령의 낮은 인기로 내년 지방 선거에서 패배할 것을 두려워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일부 이탈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연합뉴스

# 중국-대만 ‘총성 없는 첩보전’

## 이중간첩 대만서 징역형

중국과 대만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양안의 첩보전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대만 공군 예비역 장교 출신의 이중간첩이 대만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양측의 ‘총성 없는 전쟁’ 실상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타이베이 고등법원은 전날 대만 공군 예비역 대위 천귀웨이(陳國瑋)가 중국에 간첩으로 포섭돼 국가기밀을 유출한 죄로 3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천귀웨이는 지난 2015년 4~5월 중국에 회사와 레스토랑을 차려놓고 현지에서 활동 중인 대만 측 정보원에게 활동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은행계좌를 개설

했다가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다가 ‘역간첩’으로 매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지령을 받고 대만으로 돌아온 그는 대만 국방부 산하의 군사정보국(MIB) 소속 현역 및 예비역 인사들과 접촉했다. 이중 대만의 한 정보당국자 옌(廖)모 씨에게 뇌물을 주고 정보를 빼내려다가 실패했다.

결국 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군 관계자의 신고로 지난해 10월 2일 대만에서 체포됐다.

중국과 대만은 서로 군사, 정치 기밀을 빼내기 위해 치열한 스파이 전쟁을 벌여왔다. 특히 독립노선을 표방하는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체제가 출범한 이후 양안관계가 냉각되면서 간첩 혐의로 체포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마크롱, 구테흐스 환대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이 16일(현지시간) 파리의 엘리제궁에 도착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코미 메모, 러시아 스캔들 ‘워터게이트급’으로 키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게 러시아 스캔들 관련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는 코미의 메모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공화당 중진인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관련 보도 이후 트럼프 정권을 둘러싼 스캔들이 워터게이트급이 됐다고 표현했다.

워터게이트는 1972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민주당 선거운동 본부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사건으로, 이후

의혹이 확산하며 결국 닉슨의 불명예 퇴진으로 이어졌다.

매케인 의원은 이날 국제공화당연구소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스캔들에 대해 언급하며 “이런 영화를 전에 본 적 있다. 워터게이트 규모에 도달하고 있다. 미국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매케인은 트럼프의 코미 전 국장 해임 이후 지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왔다. 닉슨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결정적 증언을 했던 존 전 전 보좌관은 이날 CNN에 출연해 이번에 공개된 코미의 메

모가 스모킹 건(Smoking gun·결정적 증거)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워터게이트 당시에도 닉슨 전 대통령이 보좌관에게 사건 은폐를 지시하는 내용의 녹음테이프가 결정적 증거가 돼 닉슨 사임을 이끌었다. 스모킹 건이라는 표현이 널리 쓰이게 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딘은 이어 “실령 좋은 의도였다 해도 범죄 행위를 상쇄하진 못한다. 워터게이트 때에도 배심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코미 전 FBI 국장

# 日 정부 ‘사이버 자위대’ 창설 검토

일본정부가 전력이나 철도 등 중요한 프라가 테러리스트 등으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당할 때 그에 반격할 실행부대 설치를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17일 니혼게이지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사이버 공격에 맞서 정부의 대항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는 작업을 내각사이버보안센터(NISC) 주도로 추진 중이다.

현행 부정액세스금지법상 해킹 등 시스템 침입은 그 누구에 대해서도 금지하

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부의 대항조치에 한해 특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다음 달 마련할 새 사이버 안보 전략에 이런 내용을 반영해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까지 법을 개정하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이다.

일본정부는 사이버 공격이 일본의 인프라 등에 ‘물리적 손상’을 주든지, 미사일 공격과 연결되는 등 ‘무력공격의 일환’이면 자위군 행사로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신안동, 해송빌라

- 광주 북구 신안동 353-16
- 21평, 5층중 3층, 2012년 신축
- 방3, 거실1, 전망좋은
- 신안다리 바로 옆
- 내부깨끗, 주차장 여유
- 시세 - 1억 2천만원
- 매매 - 1억 5백만원
- 임대 - 보 5백만원에 월 45만원 가능
- 주인직매
- H. 010-8902-7900

##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91-17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상수도 전기 통신설비
- 부지입구까지 인입됨
- 기타 모든업종 개발가능
- 나주호 휴양림 / 둘레길 진행중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 H.010-3605-5000

## 광양, ㄷ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중동 락희호텔 근처)
- 6층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 분양평수 210평, 실평 147평
- 점포 및 상가 밀집지역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감정/시세 - 13억
- 매매 - 6억 5천만원
- 주인직매
- H.010-3605-5000

## 금호동, 근린상가

- 서구 금호동 243-6번지
- 서광병원 맞은편 코너, 130평
- 7층건물중 701호, 7층 전체
- 법인체 인수가능
- 시세및 감정 - 7억
- 급매 - 4억 8천 5백만원 (대출 4억 2천 5백만원 포함)
- 주인직매
- H.010-3605-5000